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연합, 은행세 부과 초안 발표

- 유럽연합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미리 은행세를 거둬들인 뒤 이를 국가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힘.
 - 은행세 부과(안)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로의회 의 승인을 거쳐 2011년 입법화 될 예정으로 알려짐.
 - 동 기금은 부실은행의 구제금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·담보제공, 일시적인 부실자산 구입 등 금융위기와 파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임.
 - 은행세를 사전 부과하여 은행이 비용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, 유럽연합의 원조원칙에 부합한 기금집행 원칙, 기금과 각국 예산의 분리 운용 원칙 등이 강조될 예정임.
 - 은행세는 은행의 자산, 부채, 이익 중 하나에 부과될 예정이며, 은행세 부과방식이나 전체 기금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유럽연합 회원국의 토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임.
- 독일 등의 은행세 도입 계획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각국의 기금규모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강도 높은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.
 - 독일은 연간 약 10억유로(1조5천억)를 금융위기 대비 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며, 스웨덴은 향후 15년에 걸쳐 GDP의 2.5% 수준을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임.
 - IMF는 과거 금융위기 해소를 근거로 할 때 각국은 GDP의 2~4%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밝힘.
- 한편,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은행세 부과(안)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.
 - 기본적으로 은행세는 은행의 신용·재정 건정성 약화시 구제금융이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대마불사 관행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.
 - 프랑스 재무장관은 사견임을 들어 은행세 부과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기금과 정부예산의 분리운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힘.

(Financial Times, 5/26)